

# “충남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 반대”

### 충남도의회 대선공약 채택 촉구 건의안 전달에 송지용 도의장, “타당성 없다” 불가 입장 제시

충남도의 금강하구 해수 유통 주장과 관련해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농·공업 용수원 확보 문제와 취수시설 상류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송 의장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금강하구 해수 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정당,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임의회에서

는 해수 유통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우선 하구 독 상류 3km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km까지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오는 11월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도 예정된 상태다.

더욱이 전남도가 금강 하구 자연성 회복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등 충남과 전남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의장은 이와 관련해 시도의회의



장협의회에 참석,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정부에서 이미 금강하구 독 해수 유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간 4억 3천만 톤의 농·공업용수 담수를 마련할 대안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 충남도의회 의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염분 유입에 따른 농·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업용 취수장과 농업용 양수장 시설의 상류 이전시 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

문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강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송지용 의장은 “금강하구 해수 유통 시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전북은 물론 충남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현수준의 용수공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행정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북도 행정과 정치권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소외되지 않는 인권 도시’

### 장애인 사업장 유치 등 일자리 자립기반 강화 등 ‘전주시장 도전’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장애인 공약 발표

전주시장 출마에 나선 조지훈 전 전북경계제통상진흥원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고 교육과 안전이 보장된 전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2일 조지훈 전 원장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누리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권 도시 전주를 진화하기 위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전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약 3만여 명으로 이 중 중증장애인은 1만여 명인 가운데 이들 대부분 문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교육, 일자리 등 제대로 된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해 빈곤함에 처해 있다고 조 원장은 말했다.

이에 우선, 장애인들이 당당히 경제의 주체로 자리 잡아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사업장을 유치, 최종 중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총 1천명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어, 장애인 종합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원스톱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장 직속 장

애인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팀장을 장애인인 말도록 해 장애인 관련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니버설 디자인 전주로 도시’를 재구성, 즉 법적 최소 기준을 넘어 장애인 포함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반영해 제품·건축·공간 등 물리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교육·복지·정보·서비스 등 사회적 디자인으로 확대하고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과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기관 운영 등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형 주택 마련 등 탈시설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 보행로를 확보하고 감염병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장애인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이외에 장애인 여행별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장애인 관광·문화 향유권을 혁신적으로 증진하고 탁진구 내 장애인 복합문화관 건립, 장애인 문화예술단 창간·운영 지원 추진 등도 담았다. 조 전 원장은 “장애인이 편리한 도시가 구성될 모두가 함께 편리한 도

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장애인에 맞춰진 정책이 많다”며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과 김성주 의원을 만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 등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 정책 못지않게 장애인 정책에도 공들였다”며 “자립생활과 권익을 보장받는 인권 도시를 기반으로 모두가 누리는 전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원장은 지난 9월 7일 전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전주를 땀으로 적시겠습니다. 청년에게 배우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전주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통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가고 있다.

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 도의회 행자위, 본예산 심사 대비 신규사업 보고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보고회’를 2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2022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2022년 본예산에 워드코로나 사태를 대비한 신속한 경제 회복 분야 지원 등 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포스트코로나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됐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원주군의회, 둔산공원 내 탄성트랙 조성 간담회

원주군의회(의장 김재찬)는 2일 봉서초 청원초 봉서중 운영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둔산공원내 탄성트랙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둔산공원내 라운드 트랙이 노후화 되어 학생들과 주민들의 부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탄성 트랙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은 라운드 트랙 조성을 통해 인근 주민들과 체육특기생 학생들이 훈련 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들의 운동공간으로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는 주민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 1회용품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 도의회 이명연 환복위원장 경진대회서 ‘우수상’ 수상

전북도의회가 2일 울산 전시경진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제출법 이후 지금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100건(광역의회 66건, 기초의회 34건)의 사례 중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 30점(광역 24, 기초 6)이 선정됐



고 이후,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광역 11, 기초 3)의 우수사례가 결선(전문가심사+국민평가단)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전북도의회는 ‘1회용품 플라스틱 범람에 대한 거버넌스적 해결방안 모의’에 대한 주제로 민관협력에 관한 모범 사례를 구축했고, 이를 위해 ‘전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조례에 근거해 전주 객사 및 전북대학교를 1회용품 플라스틱 다 소비 구역으로 선정하고, 다목적 공용 테이크아웃컵을 제작,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현장 발표를 맡은 이명연 위원장은 “1회용품 증가에 따른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실천운동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지방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COP26 연설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SECO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전북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비상근무 돌입

### 내달 15일까지 대책본부 운영

전북도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속 대응 체계에 돌입한다.

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시·군·읍·면·동 28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가을철은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워드코로나로 인한 야외 인형 인구 증가 역시 위험요인으로 보고, 산불 임차헬기 배치,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 운영 등 예방 활동과 초동 및 화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가을철에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이 등산객 약초 채취 등 입산자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객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불취약지 8만9,000ha와 등산로 82개 노선 442km를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조심 기간에는 도내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400명을 투입해 입산통제 및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80대를 가동해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남원, 고창, 임실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화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진화체계도 구축한다.

산불조심 기간 중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적발 시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벌칙(3년 이상 징역·실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

허전 도 환경복지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객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다수인 만큼 입산 시에는 라이터 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돼 ‘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시의회, 의정 활동 역량강화 교육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2일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완주 상권리조트에서 가졌다.

이날 교육은 소속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분권의 발전 방향 공유와 예·결산 심의, 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주영진 지방의정연구소장(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내용과 자치분권, 박원순 나라살림연구소 박사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예·결산 심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 도성희 익산시 성폭력상담소장은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서 “성비우는 일상의 문제로 누구나 성비위자가 될 수 있다”면서 “작은 실수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일상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그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번 교육이 더 나은 의정 활동을 위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